

여야 정치권, 전북 찾아 민심 구애

더민주 중앙당, 예산 정책협의회 개최·국민의당 박지원 현장 행보... 새누리 김무성, 내일 민생투어

당권 경쟁이 한창인 여야가 전북으로 모이고 있다.

그동안 같은 호남권이라해도 전남 광주 등에 비해 다소 위축돼 보이던 전북이 정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9일 전북도를 찾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은 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 김태연 예결위 간사, 김춘진 도당 위원장, 이춘석,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앙당 인사들의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방문이고 전북예산 확보에 협력할 뜻을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북 현안 문제를 꼼꼼히 청취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참총은 지방정부 위원회 공극적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예산이 끌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위원장은 "고향을 떠나온지 오래됐는데 기억해줘 감사하다. 전북 본예산 반영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9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 등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

생문제를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또 10일에는 군산으로 이동해 농·축산·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방문일정도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표는 오는 11일~14일 3박4일 일정으로 전북 민생투어에 나선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는 김 전 대표의 방문은 대권 행보라는 시각과 함께 전북 정치 변화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30일에도 전북 정

읍과 임실을 방문하는 등 전북 민심 잡기 몸을 흔적이 있었다.

김 전 대표는 11일 익산·군산, 12일 김제·부안·고창, 13일 전주, 14일 임실·남원 등 전북 전역을 돌 예정이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모친 고향인 남원 운봉을 찾아 지역 민심과 지지도 확산에 나선다.

정가 관계자는 "각 정당들이 전북 행거에 나서는 걸 보니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며 "이들의 방문 성과에 따라 의욕만 앞선 행보로 끝날 수도, 민심을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송영길 "새누리, 10년전 盧 반대하러 美에 조공단 보내놓고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사드 방증을 비판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 "2006년 노무현정권시절 새누리당 이상득·정형근·박진·전여욱·황진하·정문헌 등 6명의 야당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적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시작전권 이전합의를 부정하고 연정해달라는 골육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중구방문단 활동을 비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민주 초선의 방증을 비판한 박 대통령을 겨냥,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에 거짓보고를 하면서 외교부도 소외시키고 대통령이 일방 결정한 사드배치를 해놓고 국론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식 수권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나 역시 초선의원시절 부시 정부의 선제공격전략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후세인정부하 허버니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했다"며 "당시 미국대사와 정대철 대표, 노무현 대통령까지 방문을 만류했지만 결국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고 맞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민주 지도부를 향해선 "우리 더민주 지도부는 적극 이들의 활동을 옹호및참해주고 이들이 확인한 현지여론을 기초로 대중국관계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민주를 러시아 방문도 계획해 야한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청취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말에 걸맞는 행위"라고 제언했다. /뉴스

추미애 "대선 1등 후보 흡집내면 공정도 혁신도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9일 내년 대선후보 경선 계획과 관련, "당원과 국민이 지지하는 1등 후보를 흡집 내고 상처 내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도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경선 후에는 후보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고 지지자가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 반드시 대선경선 불복방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대선 경선의 시작은 대선 승리의 시작"이라며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을 믿고 희망을 갖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일생동안 통합에 앞장서신 것처럼 나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면 서로를 흔드는 분열의 대못을 반드시 뽑아내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가 되고 패자가 비주류가 되는 분열의 정치를 모두가 주류가 되는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불통에 맞서겠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권선거를 막아내겠다"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거국 중립태도를 구성하도록 관철시켜겠다. 편향되고 왜곡된 특정 종편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뉴스



후보들의 인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완주진무장 지역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두세훈 변호사 성명서 "뇌물·폭력전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 당원들과 소통 없어"

국민의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당 익산직 지역위원장 전략공천 반대 주장이 제기되더니 이변에 임명업 완주진무장 지역위원장 선임을 두고 철회 요청이 나오는 등 당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두세훈 변호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당은 다수 당원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뇌물과 폭력전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면서 "국민의당은 완주진무장 군민을 무시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지역위원장 임명절차에 있어서도 당은 민주적 선출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임명했다. 당은 경선 등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내정했다. 또 풀뿌리 지역당원들과 단 한번도 소통하지 아니한 채 명령하달식 일방적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소중히 여기는 새정치의 가치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당헌 제2조 '성숙한 당내민주화와 풀뿌리 분권당구 구현'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저버린 국민의당에 실망감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국민의당이 완주진무장 지역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당과 함께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두세훈 변호사

야당, 폭염 속 가정용 전기세 인하 추진

더민주 "기업용·가정용 원가 차이 면밀히 분석할 것" 국민의당 "가정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서 4단계로 낮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가정용 전기세 절감의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요금 문제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어떤 형태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102원90전이다. 그런데 주택용

의 경우는 같은 전기라도 144원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 원가에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전기요금 체제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했다.

더민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에너지소위 위원장인 홍의표 의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소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지는 우리 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신자부가 서민들의 이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 당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김성식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7월29일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가정용 전기 누진폭탄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씌워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 약관을 고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누진폭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

더민주, 가합의안 공개 박지원 비난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합의문을 공개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재차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이 조금 이 아니라 너무 많이 실수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 대표가 어쩌다 다 판이 깔려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받아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직접 협상을 했던 김관영 수석을 향해서도 "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현안 8가지 각각에 대해 여당의 입장이 뭔지, 수용할 수 있는지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죽해서 각 대표들에게 보고하고 대표의제로 할 것을 합의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 정도 브레인스토밍은 전화로도, 만나서도 하는데 이걸 저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며 "난 우리 원내대표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논란은 원내대표 회동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것"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 시점과 관련 "오늘은 아니다"라며 "저쪽 잔치날(전당대회)에 뭘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수석 간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소집된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결산안과 추경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는 17~18일, 정무위는 18~19일 각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또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체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 수석은 가합의안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고, 박 위원장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김관영 수석의 '수석간 가합의안이다. 당 별로 내부논의를 거친 후 내일 오전 9시30분에 다시 만나서 최종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보고 연락 달라'는 글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뉴스

더민주 "야3당 합의사항, 추경협상과 연계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야3당 8개 합의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여야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3당이 8개항에 합의했는데 이 8개항은 야3당이 정기국회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8개항이 추경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추경이 우리가 볼 때 불만족스럽지만 그 예산이라도 실효성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더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유가족의 쓰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추경과 연동한다는 것도 기승 아픈 사람들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정정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사건사고가 있을 때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 3당 회담에서 다룰 중대한 사항이다. 다른 당의 대표들도 유념해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연계할 수는 있지만 연계를 위해서 임시회야 추경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며 "여당도 야3당이 합의하고 촉구한 8가지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협치의 길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8개항에 합의했다. 8개항은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 ▲5·18 특별법 개정 공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임명 서별관 청문회 개최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개최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등이다. /뉴스

국민의당 "차정권 색깔론, 국정운영 매뉴얼인 듯"

국민의당은 9일 일부 야당의원들이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에 동조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 "대통령의 색깔론과 보수단체의 공격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운영 매뉴얼인듯 매년 되던 나타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론과 이들 보수단체의 공격은 때려야 뭉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한 소통과 민주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사드'를 반대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불순 세력'이라는 색깔론으로 여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야당을 비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단체가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행태가 박근혜 정권 내내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걸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박근혜 정권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해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